

3. 신용보증 활성화 조치 평가

- (정책 내용) 정부는 재정에서 5천억 원, IBRD 차관에서 10억 달러를 신용보증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경색 완화 방안을 발표
- (배경) 대위변제액의 증가로 신용보증기금이 고갈될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의 확대가 추진된 것으로 판단
- (효과) 대규모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액의 증가, 기존 대출에 대한 대체 보증 수요, 전반적인 신용 여건 악화로 신용 경색의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- (경기 부양 불가피) 신용 보증 기금의 확대는 변제 부담의 증가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신용 경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. 따라서 경기 부양이 유일하고 시급한 신용 경색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

□ 주요 정책 내용

- (신용보증 기금에 정부 자금 출연)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약 1조 8천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 경색 완화 방안을 발표
 - 재원 : 재정에서 5천억 원 그리고 IBRD차관에서 10억 달러(1조 3천억 원) 조달
 - 부분 보증제 : 은행과 보증기관이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 보증제 도입
 - 보증료율 차등화 : 현재 대기업 1.5%, 중소기업 1.0%로 되어있는 보증료율을 신용도 및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화
 - 금리 인하 : 금리 인하 은행에 추천 대출 한도를 확대해줌으로써 신용보증 대출 금리의 1~2%p 인하 유도

□ 정책 도입의 배경

- (신용 경색 심화 위기)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됨
 - 자산 확충 :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올해 2조 9천억 원이 추가되면서 그 규모가 약 4조 원에 이르러 자기 재산의 20배까지 가능한 신용 보증 한도는 총 80조 원에 육박함
 - 대위변제액 증가 : 그러나 대위변제액(상환 능력을 상실한 기업을 대신해서 기

금이 보증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 준 금액)이 올해 들어 1조 6천억 원(1~7월)에 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자기 재산은 2조 4천억 원으로 감소하고 신용 보증 한도도 48조 원으로 축소됨

- **보증 여력 잠식** : 여기에 7월 보증 잔액은 이미 3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보증 여력은 16조 9천억 원이며 이는 가용 자기 재산이 약 8,500억 원 가량임을 의미
- **고갈 위기** : 따라서 현재와 같은 대위변제액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신용 보증 기금은 올해 안에 고갈될 위협에 처해지게 됨

- **(경기부양 필요성 절감)** 최근 정부는 신용 경색의 해소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8월들어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음
- 연초부터 정부는 중소기업과 무역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자금 투입 및 무역 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신용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

도입 시기	정책 내용
1월	·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7천억 원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차관 10억 달러 출연 · 올해 만기 도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5억3천만 달러 상환기한 1년 연장 · 기업의 수입 신용장에 대한 한시적 정부 보증 시작
2월	·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용 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 원 추가 증액
3월	· 주택 신용 보증에 세계은행(IBRD) 차관 2억달러 출연
8월	· 대기업 무역 어음에 대한 신용 보증 확대 · 중소기업진흥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해 1조 5천억원 직접 대출 · 신용보증기금에 IBRD 차관에서 10억 달러, 재정에서 5천억 원 출연 결정

- 또한 10월부터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을 팽창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어서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인 측면 도 있음

□ 신용보증기금 확대 효과는 제한적

- **(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 여력 잠식)**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불구하고 대위

변제액의 증가에 따라 신용 여력이 크게 잠식될 것임

- 자금 투입의 기대 효과 : 1조 8천억 원의 자금 투입은 약 36조 원의 신규 대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대위변제 부담 : 1~7월 중 1조 6천억 원에 달했던 대위변제액 부담이 7월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가정할 경우 그 규모가 8~12월 중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보증 여력 잠식 : 이 경우 자산의 순증가는 7천억 원에 그쳐, 신규 대출의 창출 효과는 14조 원에 불과할 것임

- (기존 대출에 대한 대체 보증 수요)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 수요가 많아 신규대출에 의한 자금 공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

- 1~7월 중 신규 보증 공급은 21조 6천억 원이며 이중 10조 원이 기존 부동산담보부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한 것임
-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경우 BIS 기준의 위험가중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
- 은행들의 위험 회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보증제는 위험 부담의 일정 정도를 은행에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, 은행이 대출을 회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임

- (전반적인 신용 여건 악화)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기능 약화와 대체 보증수요 증대 그리고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임

- 보증보험사의 경영 부실에 따른 신용 보증 기능 약화
-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거의 불가능(상반기 전체 발행의 0.9%)한 상황
- 퇴출된 5개 은행의 회사채 지급보증분 2조 2천억 원에 대한 대체 보증 필요

□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대책

- (신용보증기금 지속 확대의 어려움)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자금 공급은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유일한 자금 공급 방안이나 대위변제부담의 증가로 지속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
-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은 10%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대위변제액의 지불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됨
 -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여력을 총 동원할 경우 올해말 신용보증잔고가 60조 원(98년 7월말 현재 보증 잔고 : 31조 1천억 원)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위변제 부담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전망
 - 따라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투입 지속은 갈수록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전망
- **(경기부양책에 기대)** 최근 정부는 9월까지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재정지출 및 통화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신용 경색의 해소 정도는 경기 부양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
- 경기 부양에 앞서 자금 중개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증자를 하여 BIS 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
 - 정부의 부양책이 향후 경기 회복과 금리 하락에 대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줄 경우 신용 경색 해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
- **(정책 조율 시급)**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아직도 재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이견이 많아 경제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
- 재정적자 확대 :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GDP대비 재정 적자를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%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
 - 통화 팽창 필요 : 신용경색을 해소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, 지준제 폐지, RP 매입 등 과감한 통화 팽창 정책이 필요할 것임
 - 한편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·통화 정책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임. 이를 통해 특히, 정부와 중앙은행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어야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임

(이 태 열 tylee@hri.co.kr ☎724-4012)